

“전남광주 통합, 초광역 경제권으로 재편 돼야”

전남연구원, AI·에너지·모빌리티 등 중심 산업 제시 60분 생활권·2시간 경제권 구상...체류형 전환 강조

7월 1일 출범을 앞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인공지능(AI)·재생에너지·첨단산업을 결합한 초광역 혁신경제권으로 재편돼야 한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전남연구원은 7일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대한 부문별 전략과 과제'를 통해 통합특별시의 미래상과 분야별 발전 전략을 공개했다. 보고서는 경제산업, 지역개발 및 사회간접자본(SOC), 에너지·첨단산업, 농수해양, 보건·복지, 문화·관광, 환경

·안전 등 7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과 실행 과제를 제시했다.

연구진은 전남·광주 통합이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 위기를 동시에 완화할 국가 균형성장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통합 이후 지역내총생산(GRDP)은 약 160조원 규모로 확대돼 경기·서울에 이어 전국 3위 수준 경제권으로 올라설 것으로 분석했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전남의 재생에너

지·기초소재 산업과 광주의 AI·미래차 역량을 결합해 미래차 메가벨트와 RE100 기반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산업 구조는 AI, 에너지, 반도체,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공간 전략은 권역별 특화와 연결에 방점이 찍혔다. 광주권은 AI·모빌리티·반도체, 서부권은 재생에너지·데이터센터, 동부권은 이차전지·첨단화학·우주항공, 중부권은 농생명·바이오·차유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고, 이를 교통·물류·정보통신망으로 연결해 '60분 생활권'과 '2시간 경제권'을 구현하는 구상이다.

에너지·첨단산업 분야에서는 권역별 패

키지 전략이 강조됐다.

초고압직류송전(HVDC)과 345kV 전력망 확충,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RE100 직거래망, 수소 고속도로, 배터리 순환 플랫폼, AI 데이터 인프라를 결합해 초광역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농수해양 분야는 생산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광주의 소비·물류·AI 역량과 전남의 농수산 자원을 결합해 광역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브랜드 육성과 소득 안전망 강화를 병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블루카본과 해양차유, 바다연구 등 생태자

산을 활용한 소득 모델도 포함됐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제도 단순 통합을 넘어 질적 통합이 강조됐다. 필수의료 광역 네트워크 구축과 전남 국립의대 및 병원 중심 공급체계를 강화하고, 복지 분야는 최소 기준선 설정과 3층 구조 통합돌봄 체계를 통해 생활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는 방향이 제시됐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남도문화 정체성 확립과 콘텐츠 산업 확장이 핵심으로 제시됐다. 초광역 정원벨트 구축과 함께 문화예술, 해양·섬, 지역 생활을 결합한 'Art-Nature' 관광 루트 개발을 통해 체류형 관광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환경·안전 분야에서는 서남해안 생태축

복원과 생태관광 경제권 조성, 녹색전환 산업 확대, AI 기반 재난 대응 체계 구축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김영선 전남연구원장은 “광주의 AI 인프라와 전남의 재생에너지·생태 자산을 결합하면 첨단산업과 지속가능 성장의 기반이 동시에 구축된다”며 “압축성장과 초연결 전략을 통해 지역이 성장 동력을 자체 설계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연구원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통합특별시가 단순 행정 통합을 넘어 산업·공간·에너지 구조를 동시에 재편하는 초광역 경제권으로 자리 잡을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체류형 걷기 관광 육성” 도, 고흥 연흥도 등 3곳 선정

전남도는 전남 섬 방문의 해를 맞아 체류형 걷기 관광 프로그램 '섬섬 걸음' 대상지로 고흥 연흥도와 완도 청산도·보길도를 선정했다.

'섬섬 걸음' 사업은 걷기와 체험, 숙박, 지역 문화를 아우르는 체류형 관광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섬 관광 전문기초 구성된 위원회가 프로그램 구성, 교통·숙박 대책, 주민 참여 등 총 7개 항목을 종합 평가했다.

고흥 연흥도는 예술·차유·미시 요소를 결합한 순환형 트레킹 코스와 주민이 참여하는 해설 프로그램을 통해 감성과 체험이 어우러진 섬 관광 모델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완도 청산도와 보길도는 슬로시티와 역사·인문 자원을 기반으로 해양차유, 인문학 강좌 등을 결합한 1박2일 이상 체류형 프로그램을 제시해 차별성을 인정받았다.

전남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체류형 관광 확대 △관광 소비 증대 △주민 참여형 관광 활성화 △섬 관광 콘텐츠 브랜드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6월부터 운영하며 고흥군과 완도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미경 전남도 관광과장은 “섬의 자연과 문화, 주민의 삶이 결합한 차별화된 콘텐츠로 전남 섬 관광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



제32주년 서구민의 날 기념식 '나는 착한 서구민입니다'를 주제로 7일 광주 서구청 들불홀에서 열린 '제32주년 서구민의 날 기념식'에서 김기정 광주 서구청장과 김영록 광주시 문화경제 부시장이 서구민상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서구

“지역 특성·현실 반영...농민 중심 농정 전환 절실”

전종덕, 7대 정책공약 제안

진보당 전종덕 의원과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소속 8개 단체는 7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농정시대를 위한 7대 핵심 정책공약을 제안했다.

전종덕 의원은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는 무너진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회복하고 대한민국 농정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로 세울 중대한 분기점”이라며 “농민이

정책의 대상이 아닌, 주체가 되는 '농민주권시대'와 지역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한 '농민중심 농정'으로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출발점이 바로 지방 농정이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떤 농정공약이 채택되고 실현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 의원은 “오늘 제안되는 7대 핵심 정책공약은 단순한 정책 나열이 아닌, 위기에 처한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 지역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실시 △농자재 지원 △공정가격 보장 △공공의료 확충 △성평등 농정 △난개발 방지 △친환경 생태농업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전국의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농정공약을 선거의 중심 의제로 삼고, 농민의 삶을 지키는 길에 책임 있게 나서주기를 촉구하며 “진보당 또한 7대 핵심 농업정책 공약을 분명히 세우고, 지방정부에서 실제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5·18 헌법 수록 무산...시·도 강력 반발

국회 본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담은 개헌안이 정족수 미달로 처리되지 못하자,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강하게 반발하며 재상정과 재표결을 촉구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7일 국회 본회의 방청 직후 “참담하다”며 “국민에게 개헌투표 기회를 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끝내 그 기회가 박탈됐다”고 밝혔다. 이어 “찬반은 국회의원의 판단이지만 투표에 불참하는 것은 국민



의면한 반역사적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번 개헌안에는 5·18 정신 명시뿐 아니라 위헌적 계엄 재발

강기정 “국민투표 기회 박탈”... 재표결 촉구 김영록 “반역사적 행위”... 국회 책임론 확산

투표 자체를 막는 것”이라며 “국회가 국민의 뜻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5·18과 부마 항쟁 유가족과 시민들에게 위로를 전한다”며 “다시 힘을 모아 뜻을 이루자”고 말했다. 또 “8일 본회의가 다시 열리는 만큼 재표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앞서 시청사와 전일빌딩 245 외벽에 헌법 전문 개정안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내걸고 5·18 정신의 헌법 명시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개헌안 표결 무산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5·18 정신을

방지와 지역균형발전 의지가 담겨 있다”며 “국회는 즉각 본회의를 다시 열어 개헌안을 재상정하고, 국회의원들은 양심에 따라 표결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헌안은 제적 의원 286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인 191명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이날 표결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성립되지 않았다. 전남도는 향후 광주시와 시민사회, 정치권과 협력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박정렬 기자 holbu@gwangnam.co.kr

세척력이 우수하고, 농작물에 피해가 없는 비닐하우스·차광페인트 제거제



고객센터 062.654.7896
010.7564.4706

이 메 일 tank10323@naver.com
홈페이지 www.kcsoap.com

광주공장 광주광역시 북구 양일로 137-1
담양공장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169

